

“표준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 교육연구, 금융분야 등의 국가기관 전산망 건설작업이 한창이다. 이들 국가 신경조직의 전산화는 통신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산업발전 및 국민편익이라는 차원에서 표준화 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 당면 과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결모양은 향후 민간부분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각계의 시각과 주장이 다르고 저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23일 “전산망 기술 및 기자재 표준화 추진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당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추진 문제에 관해 설문을 실시한바 있다.

이에 응답 결과를 집계 분석하여 게재하면서 이 조사결과가 우리나라의 전산망 관련 표준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편집자註)

회에 참가한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서배부
-응답자 1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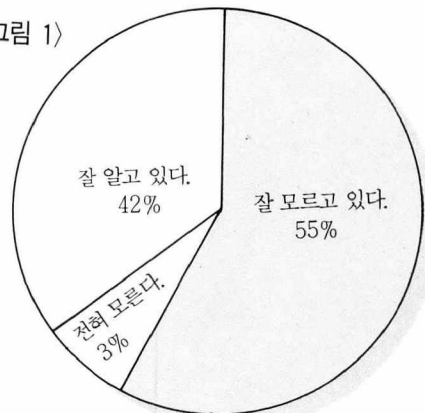
3. 주요 설문 내용

- 전산망 관련 국내의 표준기구의 활동상황과 동향인식
- 표준화가 산업과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 표준화 추진시기, 필요성, 추진주체 및 사무국 수행기관
- 표준화 참여의도
- 표준화와 국내정보통신시장의 개방속도
- 표준화 시행형태 및 인증시험 업무 수행기관
- 표준화 추진의 관심분야·장애요소·문제점

4.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설문1: 전산망관련 국내의 표준기구의 활동과 동향에 대한 관심도

〈그림 1〉



1. 조사목적

- 국내외 표준화 동향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 파악
- 전산망 표준화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접근방안의 제시
- 민간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 표준화 추진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도출
- 표준의 시행형태, 시기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조사

2. 조사방법

- 전산망 기술 및 기자재 표준화 추진을 위한 합동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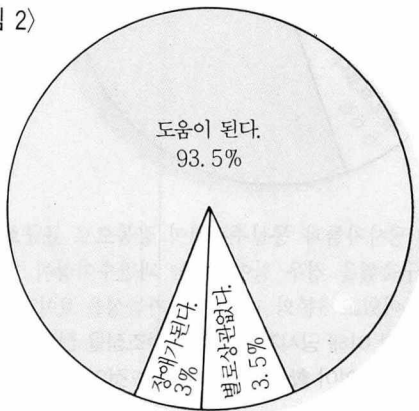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들은 국내의 표준화 관련기구

의 활동상황과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 지난 7월 22일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에서 표준화가 각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편익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는 강력한 업계의 주장에 견주어볼 때 이같은 정보부재현상은 업계의 원론적 주장과 실질적 접근을 위한 노력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설문2. 표준화가 산업과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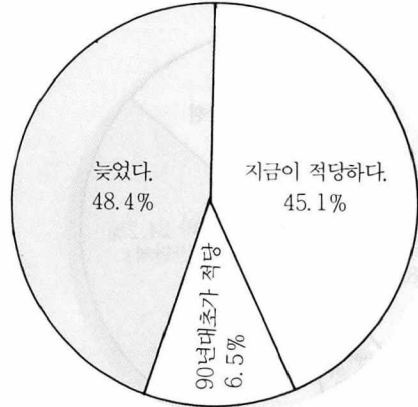


표준화가 산업과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가 93.5%, 「장애가 된다」 「별로 상관없다」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3%, 3.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가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표준의 시행이 기술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개선·보완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별로 상관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표준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설문3. 표준화 추진시기

표준화 추진시기에 관해서는 「늦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8.4%, 「지금이 적당하다」가 45.1%로 전체의 93.5%가 지금부터라도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0년대 초가 적당하다고 한 응답자는 6.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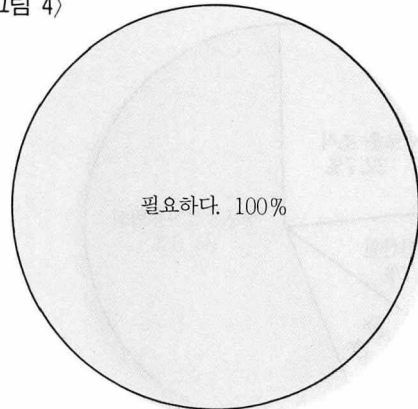
〈그림 3〉



* 표준화 추진시기에 대한 인식은 최근의 국제표준기구의 표준화 활동과 일본·유럽 등 통신 선진국의 OSI 채택 경향등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설문4. 국제경쟁력 제고와 표준화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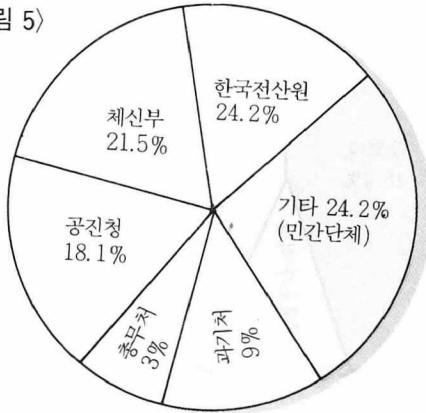
〈그림 4〉



모든 응답자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화가 산업과 기술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응답자들도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문5. 표준화 추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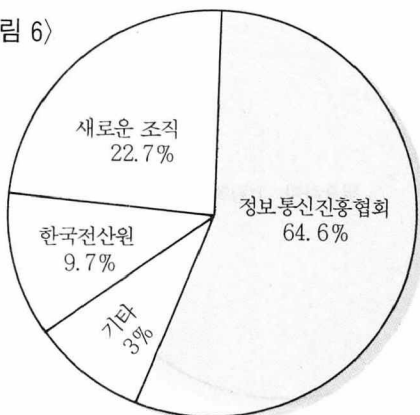
〈그림 5〉



표준화 추진 책임주체에 대하여는 한국전산원, 별도의 민간단체, 체신부, 공업진흥청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통신주관청 중심조직(45.7%), 또는 별도의 민간단체가 전담(24.2%)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6. 표준화추진기구의 사무국 기능 및 홍보업무 전담기관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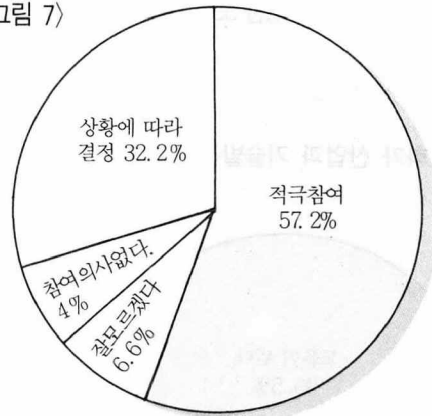


표준화 추진기구의 사무국기능 및 홍보업무 전담기관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64.6%)이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적임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밖에 「새로운 조직(22.7%)」 「한국전산원(9.7%)」, 그리고 나머지(3%) 순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응답자의 성향은 설문4에서 민간단체가 표준화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24.2%)는 응답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7. 민관협동으로 표준화 추진체제가 구축되는 경우의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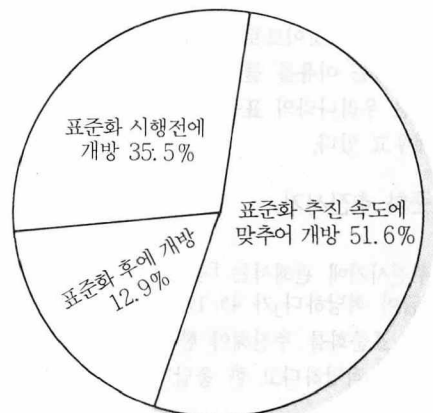
〈그림 7〉



각 이해 당사자들과 통신주관청이 공동으로 표준화 추진체제를 구축했을 경우 참여의사는 과반수이상 「적극적(57.2%)」이었고 3분의 1은 참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표준화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조정을 전제로 통신주관청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설문8. 표준화와 국내정보통신시장의 대외 개방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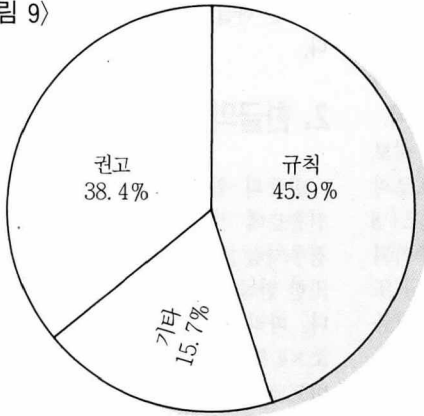
〈그림 8〉



과반수 이상이 표준화 추진과 국내정보통신시장의 개방 속도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1.6% (주로 중소기업)가 표준화 속도에 개방속도를 맞추어 줄 것을 희망.

설문9. 표준화 시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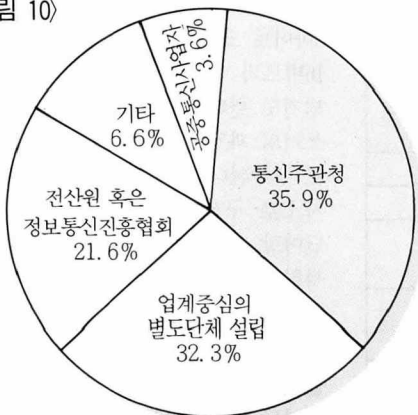
〈그림 9〉



표준화 시행형태에 있어서 규칙이 4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권고가 38.4%, 기타가 15.9%였다. 기타로 응답한 15.7%의 대부분은 규칙과 권고의 절충형태를 원했다.

설문10. 인증시험기관

〈그림 10〉



표준화 시행에 따른 인증시험담당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민간단체이고 한국 전산원이 법인체임을 감안할때 과반수 이상이 통신주관청보다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선호하고 있음.

설문 11. 표준화 추진에 관한 관심분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데이터포맷, 한글코드, 키보드, 기타 통신기구 및 선로 등으로 나타남.

설문 12. 표준화 추진의 장애요소 또는 문제점

- 표준화추진 조직 일원화의 어려움.
- 예산 인력
- 각계의 이해 상충등을 들었다.

5. 결 론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국제 표준기구의 동향과 국내외의 표준화 추진활동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전담기구 운용 및 전문 홍보지 정기간행 등)

둘째, 정부의 표준화 관장 부서(현재는 체신부, 공진청, 과기처등으로 다원화)를 일원화하고, 각 단체(한국전산원, 표준협회 등)의 표준화활동을 조정 통제하여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표준화 추진체제는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행사를 되도록 많이 개최하여 산·학·연·관의 컨센서스를 갖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네째, 표준의 인증과 시행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표준화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경계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개선 보완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예산, 인력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